



20일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왼쪽)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를 잇따라 찾아가고 있다.

도 “새만금, 세계 최고 모빌리티 실증지역으로”

우범기 정무부지사, 산업부·해수부·기재부 등 찾아 국비 확보 활동

전북도가 20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새만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3월부터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최훈 행정부지사,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차례로 광복 회보를 이어온 전북도는 이날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막바지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우 부지사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새만금에 구축된 1~2단계 모빌리티 실증인프라에 이어, 3단계 최종 실도로 실증단계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모빌리티 실증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8년에 완료된 1단계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시험장은 낮은 수준의 저속주행이 가능하고, 올해 준공 예정인 2단계 새만금 방조제 하부도로 시험장은 새만금 4호 방조제 하부도로와 명소화 부지 곡선도로에 구축해 국내 최장의 고속 자율 주행 평가가 가능하다.

이날, 우 부지사가 요청한 3단계 사업으로 새만금 지역에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연계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될 경우 80km/h 이상 고속 주행 및 곡선로가 반영된 테스트와 일반차·자율차 공동 운행 기반의 실증사업이 가능해지며, 세계 최고수준의 모빌리티 실증지역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 부지사는 해양수산부를 방문, 서해중부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 지 조성을 위해 기반 및 시설설계용역

비로 14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새만금 스마트수산물 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수산물 위관물량이 나뉘는 가공유통 구조로 원물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개발 및 유통 활성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산단 2공구 약 1만평)에 수산물 R&D센터와 협력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를 찾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 반영 활동과 함께, 도 쟁점사업들이 부처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오는 31일까지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지휘부 실·국장 등이 국가예산 확보 방문 활동에 총력 매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 비전·정책, 대선 공약과제 개발 나서

24일 민주 전북도당 정책엑스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전주시 병)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함께, 지역의 비전·정책과 공약과제 개발을 위해 2021 전북순회 정책엑스포 in 전북 - 전북의 비전을 제안하다’를 개최한다.

오는 24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현장과 줌 화상회의를 결합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는 2022년 대선 대비 전북 비전 및 정책 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자리이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2022년 대선 성격과 전망을 주제로 기초발제를 맡고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어,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특화 도시로”를 주제로, 안호영 국회의원은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새만금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을 주

제로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주제로, 김수홍 국회의원(익산시갑)은 “전북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전략”을 발표한다.

또, 이영미 전북테크노파크 단장이 “전북형 그린바이오”를 주제로, 이지훈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주제로, 오주영 우리농협 대표가 “새만금 남북평화 농업특구 조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윤명숙 전북대학교 사회대학장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전북형 실리온밸리 조성”을 주제로, 김시백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새만금 대형 국가중형실증연구단지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주제로,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이 “대학 중심의 산학 클러스터 조성”을 주제로 전북의 비전 및 정책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또한, 전북지역 시·도의원, 일반 당원 등 100여 명이 온라인 청중으로 참

여, 자유롭게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은 “도당이 민주연구원과 함께 주최하는 정책엑스포는 전북의 비전을 제안하는 자리다. 전북이 K뉴딜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북만의 특색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책엑스포에서 발표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전북 발전의 청사진이 되고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는 ‘지역의 비전을 제안하다’는 대주제 아래 지역의 경제·학계·시민사·민간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청취, 경제·노동·복지·도시·교통·문화·관광·주거·의료(방역)·보육·교육 등 지역 현안 및 의제를 발굴하고, 2022년 대선 대비 지역 비전 및 정책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호상 기자

민주, 법사위서 민생법안 단독 의결

90여건 이상... 박주민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사회권을 둘러싸고 여야 간 파행 끝에 여당 단독으로 90건이 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원장 사회권을 놓고 고성 쉼인 공방을 주고 받으며 한동안 대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99건의 민생법안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여당이 단독 의결을 시도한 것이 법사위 파행의 계기가 됐다.

민주당은 분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생법안 처리와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보고서 채택 필요성 등을 이

유료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제대군인지원진흥과 참전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등 90건이 넘는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일부 조항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법사위에 계류해 추가 논의의 하기로 했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공모사업 균등 지원 방안 누락 지역 없어야”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 심사 이어가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창)는 20일 전북도의 실·국·원 예산심사를 마치고,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김만기 예결위원장(고창)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과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사업과 관련해 공모사업이지만, 도내 시·군에 균등한 지원 방안 등 누락된 지역이 없도록 도차원에서 대상을 적극적으로 챙길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장기적인 효율성을 감안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계속사업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와 연도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유를 점검하고, 전북 소재 영상테마파크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도비 대응 투입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당부했다.

최영규 의원(익산)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공공선별장 인력과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에 대해 근로 기간과 재원의 타당성을 점검하며,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실효성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은 등록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관련, 문화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아동급식 지원사업(1인당 6,000원)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1인당 2,500원)급식 지원 단

가 차이에 대한 타당성을 빈문하며, 추후 무료 경로식당 운영예산 확보를 통해 도민 모두를 위한 형평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강용구 의원(남원)은 환경녹지국 소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과 관련, 본 예산에 편성이 타당하나 추경에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사업의 적정 시기를 고려한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내용을 격려하며, 각 시·군에 한옥관련 프로그램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당부했고, 화재예방에 취약한 문화재 예찰사업에도 소방당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 예산 심사는 21일까지 이어지고, 이번 추경규모는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필요”

최영심 도의원



“전북도가 오는 6월 지급 예정인 재난지원금 수령방식을 기관 방문만 고집해 도민 불편은 물론, 민원인을 응대하는 현장의 담당 공무원들을 감염위험에 놓이게 했다”는 주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어려운 시기에 도내 경제 활성화와 도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할 전북의 행보는 매우 환영하지만, 지급방식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 통과를 앞둔 지금까지 주민센터를 통한 수령민을 고려 중인 전북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수령 기간 등이 잘못된 정보를 담은 포스터가 도민 사이에서 확산 돼, 주민센터에 평소보다 더 많은 민원인이 방문했던 해프닝도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 6월 말 지급 예정인 재난지원금 수령이 방문 당차의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영심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에도 현장 일선에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일선 담당자들을 위해 전북은 비대면 수령방식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주민센터 내 민원 담당자를 포함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방식에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병행으로 도민건강과 행정업무를 줄여, 도민 공감을 얻었다”며 “전북도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오프라인 두가지 수령방식을 병행하고, 사회적약자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활환경을 적극 고려한 지급방식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도교육청, 보통교부금 확대 위한 노력 부족”

박용근 도의원 “세입에서 비중 높아 확대 사활 걸어야”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의원은 20일 제3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북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내렸다.

박용근 의원은 “1회 추경안 기준 전북도교육청의 세입 총액은 3,355,878억 9,600만원이고, 이중 중앙정부지원수입인 보통교부금이 2,399,078억 2,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1.1%를 차지한다”면서 “하지만, 시·도별 보통교부금 교부현황을 보면, 전북은 올해 5.5%로 9개 도중 7위로 보통교부금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인 기준재정수요사업 발굴과 전북도에 유리한 지표 평가 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추가적으로 이월률 불용률, 상반기 예산 집행비율,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비율 등을 개선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교육청의 세입에서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도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5분 발언

“모악산 탐방로·주차장 정비·신설을”

김동현 전주시의원, 완산체련공원과 탐방로 연결 등 제안



전북도립공원 모악산의 주차장 해설 등을 위해 출입로 정비 및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전주시의회 김동현(더불어민주당, 삼천·2·3동) 의원은 제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모악산 탐방로를 신설 및 정비해 방문객의 주차를 분산시키고, 등산로 입구에만 한정된 주차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인 기준재정수요사업 발굴과 전북도에 유리한 지표 평가 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추가적으로 이월률 불용률, 상반기 예산 집행비율,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비율 등을 개선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교육청의 세입에서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도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하지만 모악산 주 출입로 3곳 중 전주 중앙동 방면은 대형 주차장이 전무하고, 56편의 작은 주차장과 비포장 공터가 전부다. 특히 완주 구이면과 김제 금산면과는 달린 중앙동은 진입로에 따라 민가가 형성돼 있어 주차와 휴일이면 몰려드는 차량으로 혼잡이 심해진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주민의 많은 이해와 배려로 커다란 마찰이 없었지만,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해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 입구나 주차시설이 정비돼 있는 완산체육생활공원과 탐방로를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출입로를 정비·신설하고, 주차장을 마을 초입이나 중간에 확충해 주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상 기자

“오래된 견인차량 교체·시설보강을”

양영환 전주시의원 “값 비싼 수입·고급차 위한 장치 없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차별 없는 견인을 위해 오래된 견인차량에 대한 교체나 시설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20일 전주시의회 양영환(민생당 동서학·서서학·평화·2동) 의원은 제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차량을 차별해서는 안 될 일인데, 전주시는 비싼 차는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운용하

는 견인 차량은 과거 4대에서 현재는 2대로 줄어 시설공단이 위탁 관리 중이다. 문제는 차량이 오래되고 고급차 견인에 필요한 장치가 탑재되지 않았다는 점. 현재 시설공단이 운용 중인 견인 차량은 2008년식으로 131km 이상 운행했다. 원래 견인차량의 내용연수는 10년에 12만km로 이미 교체시기를 초과했다.

이로 인해 부품을 쉽게 구하지 못해 차량 수리가 어려움이 있고, 노후화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차량은 4사위 모두를 견인하는 장치가 없어 수입차와 고급 국산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는 맹점까지 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김명범 의심되면 '1339'로